국식클러스터 단순 산단 아닌 식품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해야

산단 전체 분양률 71.8% · 연구시설부지 분양률 0%

부지 활용도 제고 위해 문화관광 산업과 결합해야

민주 이원택 의원 "푸드파크 조성 예산 반영 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 최고의 식품문화복합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전체 분양율은 71.8%이지만 연구시설 부지는 0%에 그쳐 연구시설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산업과 결합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제조업들이 지역적으로 집적한 단지가 아니라 식품산업 생태계에서 전후방 가치사슬 주체가 집적화된 국가단위의 산업단지이다. 70%가 넘는 분양 진척된 상황이고 후방 지원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나, 식품문화 확산, 마케팅, 식품 비즈니스 공간이 부족해 입주기업들의 전방 지원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인 미국의 나파밸리, 이탈리아 피코,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경우 연구기능과 함께 다양한 컨벤션, 이벤트, 그로서란트 등 소비자 대상 유입시설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하고,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융복합 문화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하며, 이탈리아에 위치한 세계최대 규모의 푸드 테마파크 피코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의 세계 최고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며 "푸드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2023년 국가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해야"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전반기 부회장 선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5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청사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면적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에는 단순히 해당주민의 인구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청사 면적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 사무처 인력 및 업무 내용 증가에 따라 지방의회는 사무공간과 의정활동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청사 면적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의회 청사 근무 인원과 다양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정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사 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주영은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18대 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김경수 기자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전북을 찾아 '부안 유천리, 진서리 요지' 등 사적 지정구역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도내 사적지정구역 적합성 검토

최응천 문화재청장, 전북 찾아

현장 의견 청취… 규제혁신 반영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전북을 찾아 '부안 유천리, 진서리 요지' 등 사적 지정구역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문화재 관련 규제와 사적의 지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과 전북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의 문화재 행정을 책임지는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문화재 규제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안 유천리·진서리 요지'와 같이 이미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고학적인 유적 분포조사를 진행해 적합성을 검토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사적 지정 범위 재획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이후에는 인근의 보안면사무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북도,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고창군 등 문화재 담당자들과 간담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과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과 허용기준 작성에 필요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사적으로 지정된 '고창무장기포지(고창군)'와 올해 사적 지정 예정인 '임진왜란 웅치전적(완주군/진안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허용기준 설정 과정에서 규제 지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허용기준 작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현장 점검과 전라북도 내 관계 지자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규제 현장의 장벽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취약계층 전수조사 통해 전반적인 점검 필요"

윤정훈 도의원, 취약가구 가스누출 대책 마련 간담회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지난 19일 도의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근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윤정훈 의원, 김인태 도민안전실장, 이성호 사회재난과장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취약계층은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절기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라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독거노인, 상시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름보일러의 경우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시설 의무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법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오은미 도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간담회 열어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이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선희 전북아이돌봄지부장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공적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노동자는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취급해 겨우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돌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은미 의원은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존중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에는 현재 1,104명의 아이돌보미 활동가들과 2,098명의 노인맞춤 생활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다./김경수 기자

전북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해달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는 3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은 사망했다. 특히, 최근 10월에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바닷물의 온도가 섭씨 18도 이상인 경우에는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므로 9~10월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구독 · 광고문의 288-9700